

설 성수품 공급 1.6배 확대...농축산물 최대 60% 할인

정부 '설 물가안정' 대책반 가동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시민들이 설 명절 성수품으로 자주 찾는 품목의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 할인을 통해 민생 부담을 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사과, 소고기 등 10대 성수품 물량을 평시의 1.6배 수준으로 늘려 공급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내놨다.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설 성수품 소비자 가격을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설 성수품 10대 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밥, 대추 등이다.

농식품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설 전 3주간 10대 품목을 평시의 1.6배 수준인 19만4000t 공급한다. 이는 설 성수기 공급량 중 최대 규모다.

특히 설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설 전 2주 차에 전

농축산물 1인당 2만원 한도 30% 할인...내달 8일까지 명태·고등어 등 정부 비축 수산물 9000t 최대 30% 내달 2일부터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체 공급량의 44.6%를 내놓는다.

품목별로 보면 기상재해 여파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사과와 배는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7만4000t 출하한다.

배추와 무 수급은 현재 안정적이지만 한파 등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어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 비축 물량 등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수요 증가에 대비해 평시 대비 공급량을 각각 1.8배, 1.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농협과 축협 등에서 10만원 이하의 한우 선물 세트 공급을 작년보다 20% 이상 늘리도록 했다.

닭고기 공급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이날부터 할당관세 물량 3만t을 도입한다.

계란 공급량은 설 성수기 1500t으로 확대하고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가격이 오를 경우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한다.

밤, 대추의 경우 설 1~2주 전에 산립조합 저장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농축산물 할인 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농협하나로마

트 등 마트 27곳과 11번가,마켓컬리, 우체국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15곳이 참여한다.

정부는 1인당 2만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하고 참여업체가 추가로 할인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는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예산 지원 규모는 작년(263억원)의 2.2배 수준인 59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해양수산부도 정부 비축 수산물 최대 9000t을 소비자 가격 대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한다.

대표적인 제수용품인 명태는 6000t을, 국내 생산이 감소한 오징어와 고등어는 각각 800t과 1000t을 공급한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고등어(300~600g)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할당관세(관세 10~0%)를 시행한다.

해수부는 성수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행사도 진행한다.

지난 11일부터 45개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수산물 구매할 때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18일부터는 정부 할인 지원을 20%에서 30%로 확대해 최대 50%인 할인을 60%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와 설 성수품인 참돔, 김, 문어 등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다음 달 2일부터 전국 69곳에서 열린다.

해수부는 지난 11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20% 선 할인이해 발행하고 있다. 이번 설 기간(1월 11일~2월 8일)에는 발행 규모를 200억원으로 4배 늘리고 가맹점 조건도 전통시장 내 수산물 도·소매점 외에 전통시장 외 수산물 도·소매점까지 확대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다보스포럼서 '경제 외교'

기후위기·탈탄소·AI 등 글로벌 기업과 사업 협력 방안 모색

조현상(사진) 효성그룹 부회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경제 외교'에 나선다.

조 부회장은 다보스포럼에서 산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기후위기와 탈탄소,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전 세계 경제 리더들과 소통하며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6일 정·재계에 따르면 올해로 54회째를 맞는 다보스포럼은 지난 15일 개막해 닷새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다보스포럼은 독일 태생의 스위스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이 1971년 미국 하버드대 교수 등과 유럽 지역 경영인들을 초청해 창설한 '유럽경영포럼'을 모태로 한다. 1973년 참석 대상은 전 세계로 확대했고, 1987년부터 WEF라는 현 명칭을 사용했다. 이후로 저명한 정치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모여 경제를 비롯해 세계가 당면한 현안에 관해 토론하는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조현상 부회장은 다보스포럼과 연이 깊다. 조 부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특히 2007년엔 다보스포럼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Young Global Leader, YGL)로 선정, 글로벌 아젠다 위원회 멤버로서 다보스포럼의 아젠다 선정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다보스포럼을 20여 년간 다보스포럼을 참석하며 꾸준히 다져온 글로벌 인맥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 세계 정·재계, 학계의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인류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는 올해 다보스포럼은 동시다발적인 안보 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작년 10월 이후 2만5천명의 희생자를 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미국은 다국적군을 규합해 반군 근거지를 공습



하는 등 무력 충돌의 파장이 확대된 상태다.

기후변화도 핵심 의제다. 탄소감축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각국이 구체적 감축 목표 설정을 주저하는 가운데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기상 이변은 속출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다자주의 무역의 후퇴, 허위 정보 양산과 디지털 격차 등 부작용을 피하며 인공지능(AI)을 인류 번영의 도구로 활용할 방안 등도 리더들이 이번 포럼에서 머리를 맞대 현안이다.

이런 현안을 두고 '각자도생'하기보다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시 신뢰를 쌓아나가는 취지에서 이번 포럼의 주제는 '신뢰의 재구축'으로 정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달빛철도 특별법" 조속 제정을

광주경충 등 경제인 단체 성명

지역 경제인 단체들이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충자치총연합회(회장 양진석·추후원 회장)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달빛철도는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닌 지역 간 소통과 영호남 경제교류의 장으로 영호남 주민들의 30년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이 무산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충은 이어 "동서화합을 넘어 국가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동서장벽을 허물고 국가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닌 동서화합의 상징이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 발전 등 대한민국의 통합과 상생의 미래를 건설하고 영호남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법안이다"며 "이에 광주지역 경제계는 동서 상생과 화합을 이끄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뤄줄 여·야 협치 법안인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학기 선물로 딱이죠 1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9층 아이스토어 매장에서 다양한 전자기기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2월3일까지 신학기기를 맞아 전자기기 등에 혜택을 더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노트북, 태블릿, 전자워치 구매시 가격 할인부터 케이스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은행 다자녀 행복카드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를 위한 '다자녀 행복카드'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자녀 행복카드는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매도가 18세 이하인 발급 가능하다. 사진은 협약식에 참석한 광주은행과 광주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는 모습. <광주은행 제공>

전남TP, 전남형 스마트공장 지원 기업 모집

기초유형 77곳·고도화 43곳 내달 16일까지

(재)전남테크노파크(이하 전남 TP)가 전남 지역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6일까지 '2024년 전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전남 TP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비(총사업비의 30%)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기초유형 77개사, 고도화 대상 43개사 등 120개사를 모집한다.

기초 유형은 국비 없이 전남도와 해당 시·군의 지원금으로 총사업비의 60%(전남도 30%, 시·

군 30%)를, 고도화 대상은 국비 50%에 지방비 30%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에서 가능하다. 전남 TP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순천에 있는 전남 TP 본원 대강당에서 시·군별 지원 규모, 추진 절차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4배 증가...지난해 8231명 수혜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 16일 지난해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은 광주·전남 지역가입자가 8231명이라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제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로, 노후에 안정된 연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 경제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저소득(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재산 6억원

미만자) 지역가입자가 납부제계를 통해 다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생애 최대 12개월,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6350원)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는 홍보 활동을 통해 지난 2022년 신청자 2469명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난 8231명으로 수혜자를 늘렸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는데, 지난해 연금 신규 신청자의 평균 수령액

은 광주·전남 각각 67만원, 62만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고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는 설명했다.

윤중선 광주지역 본부장은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서 충분한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올해에도 보험료 지원제도를 몰라 못 받는 분이 없도록 널리 알리고 활발히 홍보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이 국민연금 제도에 매우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11.40(-14.59)
↓ 코스닥	858.42(-1.29)
↓ 금리(국고채 3년)	3.190(-0.001)
↑ 환율(USD)	1327.95(+7.75)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